

## | 강원도

## ■ 춘천시, 가축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 50% 지원

춘천시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의 농가부담금 중 50%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때 이들의 긴급회생과 경영회복을 돕고자 도입된 보험제도로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 나머지 농가 부담금의 50%(전체 보험료의 25%)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300만원 이내다.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등 16종이다.

소, 돼지, 닭, 오리는 축산업등록농가만 해당되며, 축사는 적법한 건물에 한해 지원한다.

한편, 축산업은 자연재해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크고 경영회생이 어려워 농가의 보험가입 필요성이 크지만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농가들이 보험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보험에 가입하면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나 사고 등에 따른 폐사는 시가의 80~100%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 강원 축산농가, 폭염 대응 잘했다

지난 7월 24일부터 18일간 계속된 폭염으로 강원도 내에서 닭 3,200마리(3농가)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극심한 폭염에도 불구하고 도내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과거 폭염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이 에어쿨과 환풍기 등 시설을 보완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폭염특보 발효와 함께 도가 운영한 가축 진료반과 일선 시·군의 폭염 예방대책, 농가교육 및 현장 지도 등도 피해예방에 적잖은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닭 폐사피해를 입은 3농가는 도에서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축재해보험 폭염특약에 가입돼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충청북도

## ■ 옥천·보은·영동 가축동향조사 실시

충청지방통계청 옥천사무소는 9월 1일 기준으로 오는 9월 15일까지 옥천·보은·영동군 관내 한우, 육우, 젓소, 돼지, 닭,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해 가축동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축산물(한우, 육우, 젓소, 돼지, 닭, 오리) 수급안정대책 등 축산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 분기별(3·6·9·12월초)로 1회씩 표본·전수 농가를 방문해 면접청취조사, 비면접조사(전화, CATI, FAX, E-mail, 우편조사 등)를 실시한다.

## | 전라남도

## ■ 태풍 피해 축산농 2차 가축질병 예방 총력

전라남도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의한 축산농가 피해 복구는 물론 폐사가축 등 2차 오염원에 의한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10일부터 축사 내외 일제 소독과 깨끗한 사육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잇단 태풍으로 인한 도내 축산 피해는 시설 270억원, 폐사 30억원 총 300억원이다.

전남도는 축산농가 일제 소독을 위해 공동방제단(80개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도축장, 가축시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과 축산위생사업소에서 보유한 방역활동용 전개하고 각 시군의 농가별 담당공무원(6천여명)이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방역지도를 해나가도록 했다.

특히 축산농가의 자율적 방역활동이 중요함에 따라 마을방송, 휴대폰 문자(SMS)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강력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축사가 침수됐거나 파손된 곳은 우선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깨끗한 물과 사료를 급여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가축들이 식욕저하로 사료 섭취량이 줄고 소화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료를 수시로 점검해 부패한 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축사 바닥 깔짚을 자주 교체해 청결히 관리하고 충분한 통풍과 환기로 적정습도(40~80%)를 유지하며, 깨끗하고 시원한 물 및 영양제 공급 등 사양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피해가 컸던 닭·오리 사육농가는 폐사가축에 의한 2차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축사 주변 청결 및 주기적인 소독 실시, 각종 축산기구 일괄소독 등을 해야 한다.

또 수해 뒤 급격히 증가하는 모기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연막소독 및 계사 주위 웅덩이를 제거하고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대해서는 축사 신축 등 항구적 시설 개선이 필

요하다.

한편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강력한 태풍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조속한 시일 내 복구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축산농가 모두 최선을 다하자며,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가축 운동장 확보, 사육밀도 준수, 환기개선 등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 ■ 장흥군,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 농가 현장 방문 교육 실시

장흥군 장평면에서는 최근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1대1 방문 교육을 실시했다.

장평면에는 현재 오리 165,000수(군내 1위), 닭 115,000수(군내 4위) 사육 등 장흥 북부권 축산 중심 단지이나, 인증을 받은 농가는 11농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평소 대외 무역 개방, 소 가격 하락 등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명품 축산물 생산 단지로의 이미지 제고 방안을 모색하던 조재환 장평면장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사육 법인대표 등 관련 단체장과 사전회의 및 농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번 방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친환경 축산 인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증기준과 절차, 신청서 작성 요령 등의 내용으로 실시한 교육을 받은 주민은 “바쁜 농가를 배려하여 방문 교육을 해준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드리며, 기준에 부합하게 소독 시설 등을 보수하여 빠른 시일 내 인증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규 친환경 인증 농가의 발굴 등을 통해

금년 인증 목표(23농가) 달성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전했다.

■ 담양군, 축산업 허가제 시행 대비 축산농가 교육 실시



최형식 담양군수가 오는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축산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담양축협에서 관내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축산업 허가제’ 시행 대비 사전교육에 최형식 군수가 특별강사로 나섰다.

최 군수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축산업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경제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또한 국내 축산업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불만을 양산해 국내산 축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지며 축산농가의 대내·외적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열악한 축산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에 대하여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담양뿐만 아니라 전국적

으로 실시하게 되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국내 축산업과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소비자 신뢰를 구축,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에서 ‘벗짚 농토 환원사업’을 실시해 사료가격 인상과 조사료 수급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에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에 대해 “자연순환형 농업실현 방안 모색과정에서 ‘유기농사를 수확한 농경지에 유기농 벗짚을 일부 되돌려 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축산농가의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아울러 최 군수는 “조사료와 벗짚 등 농산부산물물을 축산농가에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 2011년 2월 공포된 축산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축산업 허가대상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조항이 신설돼 허가대상 축산 농가는 총 8시간 이상 축산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상북도

■ 안동찜닭,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 완료



안동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6일 안동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안동찜닭 상인연합회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찜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관리화 지원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안동시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안동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안동찐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은 안동지역 대표 향토 음식인 안동찐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안동찐닭의 품질 특성 및 자체 품질관리기준, 안동찐닭 브랜드의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회에 앞서 지난 5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5대 광역시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안동찐닭의 인지도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7%가 안동찐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74%가 향후 안동 방문시 안동찐닭을 먹어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안동의 전통이미지와 닭을 함께 형상화한 안동찐닭의 상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안동찐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을 완료한 상태이다.

안동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안동찐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사업을 통해 안동찐닭 브랜드를 한층 더 보호하고, 안동찐닭만의 특화된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해 상표의 활용성을 높여 안동찐닭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 ■ 농축산시설물 태풍 피해복구 행·재정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통과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 및 농축산시설물에 대해 농축산물의 피해 최소화와 농업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피해복구 및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8월 30일 밝혔다.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특히 농업부문의 피해는 과거의 태풍과 맞먹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이 농작물의 피해가 큰 원인은 지난 8월 24일 집중호우와 연계됐기 때문이고 생육 초기에 있는 당근과 파종된 감자, 수확기에 있는 참깨, 콩 등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축산분야의 경우 8월 29일 현재 농가 피해 신고는 5513개 농가에 피해액이 39억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축사는 47개 농가에 49동이 파손돼 6억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가축은 소 3두, 밀 3두, 돼지 200두, 닭 300수, 벌 505군 등이 폐사돼 1억3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콩, 당근, 감자 등 농작물은 6448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접수 됐지만 침수 등으로 피해 구분이 안 되고 있어 피해액은 산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배수가 진척되면 복구 소요액을 확정, 복구비를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생육초기인 당근, 땅콩과 정식기인 양배추, 브로콜리, 파종기인 감자 등은 강풍 및 침수에 의해 고사되거나 유실되는 피해로 생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결실기인 콩, 참깨 등은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피해복구계획을 조속히 확정, 중앙지원에 반영해 나감은 물론 영농에 차질 없도록 우선 지방비 예산을 투입해 피해복구를 실시하고 중앙지원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피해복구 일손 도우미 지원센터를 행정시, 농업기술원, 농협 등에 개설,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군·경부대,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자원봉사자 등을 통한 인력을 확보 지원하고 피해 복구 장비 등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선 농업기술원에서 대여 등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